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보 도 자 료

보도

2019. 9. 27(금) 10:00부터

배포

2019. 9. 26(목)

책임자

생명·연금연구실  
김규동 실장(3775-9049)

작성자

강성호 연구위원(3775-9033)  
김세중 연구위원(3775-9059)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7매

##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회장 윤덕홍)는 9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행사 취지) 이번 정책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의 노후준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 (제1주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하고,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노후자산은 주로 부동산이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함.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제2주제: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판매유인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 < 제1주제 :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빈곤 심화, 생산성 저하, 복지재정 악화를 초래

- 우리나라 고령화는 장수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2067년에는 세계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심화될 것으로 추정됨
  - (장수화) 우리나라 기대수명(0세기준 기대여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 증가하여 연평균 0.47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지난해는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나타나 초저출산 상황에 있음
  - (고령화의 심화) 장수화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17년 8월에 이미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초과)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2067년에는 세계평균(18.6%)의 약 2.5배(46.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고령화의 심화는 개인의 노후소득, 산업의 생산성, 정부의 복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개인)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5.7%(2015)로 가장 높고, 개인의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주요국의 노인빈곤율은 일본 19.0%, 영국 13.8%, 미국 20.9%, 독일 9.5% (OECD 12.5%)
  - (산업)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4년 73.4%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 등 경기변수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 '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 수 감소, 향후 연평균 30만 명 급감
  - (정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지재정 부담은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추가부담 여력에는 회의적임
    - \* GDP 대비 복지지출비중은 '90년 3~4%에서 '14년 10.4%로 약 6~7%p 증가한 것에 비해 동기간 OECD는 18~19%에서 21%로 약 2~3%p 증가함

### 노후준비 상태 미흡, 늦은 노후준비, 노후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변화는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함
  - 부모부양의 책임을 '가족'에서 '가족, 정부, 사회 모두'로 인식이 전환됨
    - \* '가족' 책임은 '08년 40.7%에서 '18년 26.7%(14.0%p↓)로,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은 '08

년 43.6%에서 '18년 48.3%(4.7%p↑)로 변화함

- 부모에 대한 생활비 주 제공자는 '부모님 본인', 즉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됨

\*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중이 '08년 46.6%, '14년 50.2%, '18년 55.5%로 증가함

-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노후준비 상태는 미흡하고, 노후준비의 시작은 늦으며, 보유자산은 부동산 중심이어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가구주 연령대별 노후준비 상태를 보면, 50대는 노후준비 비율이 79.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에서는 낮음(54.3%)

-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취업직후'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 은퇴준비 시점은 '자녀결혼 후'로 노후준비의 이상과 현실 간 차이가 있음

\*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20~30대, 현실적 은퇴준비 시점은 퇴직 전후임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보유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부채보유와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50대 가구주 가구 소득의 51.5%수준이며(소득절벽), 부채탕감에 소득을 사용할 경우 노후 유동자산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노후준비는 지속적으로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으로 준비할 필요**

- 고령자는 연금소득을 은퇴 후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 생각함

- 노인의 사회적 관심사 중 40.6%는 노후소득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자는 은퇴 후 연금소득을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 응답함

\* 공적연금(41.3%)과 사적연금(21.3%)을 다른 소득원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함

-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히 획득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체계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한계를 고려하면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연금은 재정문제로, 퇴직연금은 연금화 문제로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아, 목표 소득대체율이 70%에 43%~48%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인 소득대체율 22%~27%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 제2주제 :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인연금보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개인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함
  -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로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  
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  
보가 필요함
  -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장수  
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경쟁력을 가짐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음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감소하여 타  
보험상품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저축성보험은 IFRS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  
시키며, K-ICS하에서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로 금리위험 부담이 커지고, 장수  
위험에 따른 요구자본이 추가됨
  - 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보험 판매를 꺼리면서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하이브  
리드형 종신보험의 개인연금보험 대체 현상이 심화됨
  - 또한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급이 확대되면서 판매채널의 판매유인이 약화됨
  - 한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세제혜  
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세제유인이 약화됨
  
-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  
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이 위축되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은 3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는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함

**보험회사는 상품공급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수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개인연금보험의 공급 위축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므로 해소 방안 또한 환경변화의 이해, 상품 개발, 수익성 제고, 리스크 관리, 판매채널 관리 등 상품 공급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 보험상품별 영향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함
  - 보험회사는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수료 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유지 및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잠재수요가 실제 개인연금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해야 함
  -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여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연금보험은 계약유지 및 연금수령을 통한 장수위험 관리가 핵심 기능이므로 보험회사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다각적인 노력” 과 함께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이 요구됨**

-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기반으로 개인은 효율적인 장수위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정교화, 적극적인 시장 확대 노력, 장기 유지 및 연금수령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보험산업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수수료 제도 검토,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